

#### 4차시 [학교폭력 중 성폭력범죄의 고소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 <학습목표>

학교폭력 중 성폭력 범죄에서 고소와 친고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며, 형법상의 친고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친고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학교폭력 중 성폭력 범죄에서의 고소와 친고죄의 고소의 특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친고죄와 고소의 특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규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 2.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특칙

### 가. 친고죄의 의의

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친고죄에는 강간죄, 간통죄, 강제추행죄, 결혼목적약취유인죄 등이 있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 제기된 공소는 공소기각의 대상이 된다. 즉 고소는 친고죄의 경우에는 소추조건 또는 소송조건으로 된다.

### 나. 친고죄의 종류

친고죄에는 크게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 친고죄는 범인이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명문의 규정으로 친고죄로 되는 경우를 절대적 친고죄 혹은 본래 의미의 친고죄라고 한다. 상대적 친고죄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을 때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로써 친족간의 절도 또는 친족간의 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죄 등의 경우이다.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그 고소는 신분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범인으로 하는 것으로 고소인이 그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는 고소의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지정하면 되고 범인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

## 다.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효력은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말한다. 한 개의 범죄사실에 대한 일부의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의 효력은 한 개의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는 원칙을 고소의 객관적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말한다. 강간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이나 협박을 별도로 고소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강간죄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

공범자의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의 효력은 그 공범자 전원에게 미치는 것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고소는 범죄사실의 특징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범자 1인에 대하여 고소하여도 그 전원을 고소한 것으로 되며, 또 공범자중 1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그 전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취급한다.

## 2. 친고죄의 적용범위

### 가. 형법상의 친고죄

형법에 규정된 친고죄로는 간통(제24조), 강간(제297조),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제300조), 미성년자 간음·추행·심신미약자 간음·추행(제302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제303조),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제304조), 13세 미만의 부녀간음·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추행(제305조)에 해당하는 죄이다.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친고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에 대하여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②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③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죄이다.

## 3. 소년범죄의 개념

소년범죄는 성인범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범죄인의 연령에 따라 범죄를 분류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 소년법 제2조는 소년범죄의 ‘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9조는 14세를 형사책임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을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범죄소년을 가리킨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①항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제2호),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으면서, 그의 성벽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우범소년(제3호)의 경우에도 특별히 소년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죄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일반 형사사건을 저지른 자와 10세 이상의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4. 소년사건의 처리 및 보호처분

가. 소년사건의 처리는 형사사법기관인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에 의해 처리된다. 다만 소년사건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이원적 구조를 띠고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소년법 제3조 제2항),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된다(소년법 제48조).

나. 보호처분은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3)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으면서 동시에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에 대한 교화·개선·보호를 위해 소년의 환경조정 또는 성행교정에 필요한 처분을 말한다.

#### 다. 보호처분의 종류·내용

소년부판사는 보호소년에 대한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한 심리결과에 의해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때에는 보호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은 보호소년에 대한 개별적이고 과학적인 심리결과를 토대로 보호소년 개개인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보호처분은 해당소년의 장래 신상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보호처분의 종류는 ①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제1호), ② 수강명령(제2호), ③ 사회봉사명령(제3호), ④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제4호), ⑤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제5호), 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제6호), ⑦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제7호), ⑧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제8호), ⑨ 단기 소년원 송치(제9호), ⑩ 장기 소년원 송치(제10호)가 있다.

1호처분은 사실상 소년을 종전의 환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서 시설의 처우의 일종이다. 6호와 7호처분도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그러므로 1호, 6호, 7호처분을 묶어 위탁처분이라고 한다. 4호, 5호처분은 시설의 처우의 일종이다. 또한 8·9·10호처분은 보호소년에 대한 조사·심리 결과 비행성이 강하여 소년원에 송치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을 말한다. 일정한 공적 시설내에 수용된다는 점에서 수용처분이라고 한다.

사회봉사명령(3호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수강명령(2호처분) 및 장기소년원송치(10호처분)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4호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5호처분)을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4호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5호처분)을 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보호처분기간

보호처분의 기간은 보호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

탁), 6호(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소년의료 보호시설에 위탁)처분의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이지만,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의해 6월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년부판사는 더 이상 보호소년을 위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기간을 종료시킬 수 있다.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처분의 기간은 1년이며 연장은 불가능하다. 5호처분은 4호처분과 마찬가지로 보호관찰처분이다. 하지만 5호(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처분은 2년으로 하고 보호관찰관의 신청이 있으면 소년부판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호(단기 소년원 송치)처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10호(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고(소년법원 제43조 제3항), 22세에 이른 때에는 보호소년을 무조건 퇴원시켜야 한다(소년원법제43조 제1항).

## 5. 소년법상 형사처분과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의 특칙

가. 형사처분은 형법에 위반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부과되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처분의 대상은 당해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년이다.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은 형벌을 수단으로 하는 제재라는 점에서 일반형사사건과 차이가 없으나 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규정으로 그 내용과 절차에 몇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나. 형사절차상의 특칙

형사절차면에서는 소년형사사건과 성인형사사건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소년법의 특성상 세부적으로 몇 가지 절차적 특칙을 두고 있다.

① 소년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는 심리의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심리를 할 때 “소년의 심신상태·성행·경력·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는 데 특별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방침을 규정해 놓고 있다. ②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 예외적 사정으로 구속될 때에도 원칙적으로 다른 피의자·피고인과 분리수용해야 한다. ③ 일반형사사건은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필요적 변론사건으로 하지만, 소년형사사건은 모든 사건을 필요적 변론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형사처분상의 특칙

##### ①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범행 당시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이 규정은 범죄행위시에 18세 미만이었으나 과형 당시에 성인이 된 때에도 적용한다.

##### ② 상대적 부정기형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③ 환형처분의 금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성인형사범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유치기간을 정하여 노역장유치를 선고하여야 하는데, 18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이와 같은 환형처분을 선고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판결선고전에 구속되었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구금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다. 벌칙규정

##### ① 보도금지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의 조사·심리과정 등 소송절차상 소년의 보호와 개선의 정책을 규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년의 명예를 존중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해 소년에 대한 보도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 ② 조회응답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해서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

####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 보호 규정

### 가.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제도

#### ①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성폭력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성폭력범죄로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 신고자 또는 고발인에 대하여도 이들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성명·연령·주소·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 신고자 또는 고발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한다.

#### ③ 증인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

성폭력범죄의 증인이 된 피해자가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 또는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그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 또는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④ 조사 횟수의 최소화 노력 명문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조사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⑤ 영상물의 촬영·보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증거보전의 특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당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⑦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의무화

법원은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재판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 ①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재판 담당 공무원은 피해자의 신원 누설 금지 및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 ② 소송진행의 협의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 및 변호인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조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열람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상대방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미리 열람



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③ 신속한 재판의 진행 및 판결 선고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성폭력범죄사건에 관하여는 복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을 종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진행과 판결 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④ 심리의 비공개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비공개 증인신문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⑤ 전문가의 의견 청취

법원은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조회 결과 성폭력범죄 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반드시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⑥ 신뢰관계에 있는 자 등의 동석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동법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 절차,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증인신문시에는 물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실에서의 증인신문시에도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⑦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 신문

법원이 일정한 성폭력범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기**

소년범죄는 성인범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범죄인의 연령에 따라 범죄를 분류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 소년법 제2조는 소년범죄의 ‘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9조는 14세를 형사책임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을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범죄소년을 가리킨다. 소년법 제4조 ①항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제2호),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으면서, 그의 성벽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우범소년(제3호)의 경우에도 특별히 소년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범죄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일반 형사사건을 저지른 자와 10세 이상의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소년부판사는 보호소년에 대한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한 심리결과에 의해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때에는 보호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은 보호소년에 대한 개별적이고 과학적인 심리결과를 토대로 보호소년 개개인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보호처분은 해당소년의 장래 신상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 평가하기

### 문제 1. 친고죄와 고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형법상 친고죄에는 강간죄, 간통죄, 강제추행죄, 결혼목적약취유인죄 등이 있다.
- (2)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 제기된 공소는 공소기각의 대상이 된다.
- (3)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효력은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말하며, 강간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이나 협박을 별도로 고소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강간죄 전체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강간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고소에만 효력을 미친다.
- (4) 공범자 1인에 대하여 고소하여도 그 전원을 고소한 것으로 되며, 또 공범자중 1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그 전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취급한다.
- (5) 절대적 친고죄는 범인이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명문의 규정으로 친고죄로 되는 경우를 말하며, 상대적 친고죄는 피고

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을 때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로써 친족간의 절도 또는 친족간의 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죄 등의 경우이다.

**정답 : (3)**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효력은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말한다. 한 개의 범죄사실에 대한 일부의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의 효력은 한 개의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는 원칙을 고소의 객관적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말한다. 강간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이나 협박을 별도로 고소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강간죄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

**문제 2. 소년법상 소년사건의 처리와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소년사건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이원적 구조를 띠고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 (2) 소년부판사는 보호소년에 대한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한 심리결과에 의해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때에는 보호처분을 하여야 하며, 보호처분은 해당소년의 장래 신상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 (3) 사회봉사명령(3호처분) 및 수강명령(2호 처분)과 장기소년원송치(10호처분)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4)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4호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5호처분)을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5)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4호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5호처분)을 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

**정답 : (3)**

사회봉사명령(3호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수강명령(2호처분)및 장기소년원송치(10호처분)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 제3항, 제4항).

**문제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 규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 (3)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 및 변호인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조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열람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 (4)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비공개 증인신문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 (5) 성폭력 범죄 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증인신문시에는 물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실에서의 증인신문시에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정답 : (2)**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3 제3항에서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